	보도자료 2009년 11월 4일(수)	작 성	미래비전비서관실
		비서관	김 상 협
		행정관	이 창 수
		연락처	02-770-7306
'09.11.5(목) 12: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녹색위,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, 27% 또는 30%(배출전망치 대비) 감축 제안

- 위기관리대책회의 거쳐, 11.17(화)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
- 건물, 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행동 본격화

- 신축건물은 '25년까지 '제로에너지' 의무화
- '12년부터 건축물 매매·임대시 '에너지소비증명서' 첨부 의무화
-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, '녹색교통 대책지역' 지정 및 관리 강화
- 전체 SOC 대비 철도투자 '09년 29% → '20년 50%까지 확대
- 내년부터 50만TOE 이상 사업장 '에너지목표관리제' 적용 후 단계적 확대
- '13년까지 약 1조원 투입, 10만여 핵심녹색인재 육성

-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(공동위원장 : 국무총리·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)는 11월 5일(목)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, 녹색성장위원, 관련분야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
- 「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」과 건축물·도시·교통의 녹색화, 에너지 효율화,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·의결하였다.

□ (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)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(2020년)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 안을 목표치가 높은 2개 안(배출전망치 대비 27% 또는 30% 감축)*으로 좁혀 제시하였다.

*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% 감축 수준

- 녹색성장위원회는 그간 산업계 등과 모두 70여 차례 토론회,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국제적인 감축경향과 국민여론, 경제주체의 부담, 국가브랜드 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하여 이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.
-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"'2안(27% 감축)'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, '3안(30% 감축)'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"고 지적하면서 "어떠한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- 녹색성장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, 8월에는 '1안(21% 감축)' 또는 '2안(27% 감축)'을 선호하였으나,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동향,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'3안(30% 감축)'으로 선호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.
-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,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
□ (녹색도시·건축물 활성화)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%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'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%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.

○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하여, 주택은 '12년부터 냉난방의 50%를 절감하도록 하고 '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 (Passive House) 수준(에너지성능 60%이상 개선), '25년부터는 제로 에너지하우스 수준(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)으로 짓도록 할 계획이다.

※ 일반건물도 '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의무화

○ 이와 함께, 에너지소비총량제를 '10년부터 시행하고, '11년부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, '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·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.

○ 한편, 녹색도시는 '10년부터 집단·동단2지구 등에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하여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극 적용하고,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녹색도시 요소들은 기존도시에 반영하여 '기존도시의 녹색화'를 실현하는 한편, 녹색도시 기술 및 산업을 해외로 적극 수출할 예정이다.

□ (녹색교통 추진)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7%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'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~37%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에 재투자하고 자동차 공동사용(Car-Sharing) 도입, 경제적 운전습관(Eco-Drive) 정착 유도 등이 추진하며, 내년부터 '녹색교통대책지역'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, 대중교통 할인포인트 도입 등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철도 등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국가교통 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기로 하였다.

○ 철도·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%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%대로 제고하고, 철도·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 지원, 보행·자전거이용 활성화,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 기술 개발도 중점 추진한다.

□ (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) 한편,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, 현행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'에너지 목표관리제'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.

○ 이와 함께 원자력 비중을 '30년까지 41%로 확대하고 '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.

○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핵심 기술개발 추진,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모델 창출,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.

- (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) 정부는 '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'을 위하여 '고용영향평가제도' 도입,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 지원, '녹색사회적기업' 300개 육성 등을 추진하여 녹색일자리가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('08년 대비)이다.
- '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'를 통해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,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을 확대하고, 자동차·철강·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며, 녹색국가기술 자격 종목(LED용용 조명시공기능사 등)도 신설하기로 하였다.
- 특히, '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.
-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정적 단기영향을 극복하고, 효율적 산업·소비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함께 國格을 높일 수 있는 '저탄소 녹색성장'을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1.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 (녹색성장위원회)

-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민간위원장은 지난 8월 4일 공개한 국가 중기(2020년)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 중 ①안을 제외한 ②안과 ③안으로 압축된 감축목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.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를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,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(11.17일)를 거쳐 최종목표를 확정하게 된다.
- 지난번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(BAU)*대비 각 ①안 21%, ②안 27%, ③안 30%를 감소시키는 것이며,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(594백만톤CO₂)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, 각각 ①안 8% 증가, ②안 동결, ③안 4%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.
- * BAU(Business As Usual) : 별도의 노력(녹색성장)이 없을 경우,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
- (의견수렴 경과) 녹색성장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 발표이전에도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차례의 토론회 및 정부내 협의를 거쳤으며, 발표 이후에는 44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에 걸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신중하게 진행하였다.
- 발표 이후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국제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감축목표로 ①안 또는 ①안 이하를 주장하였다.
- 반면,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량, OECD 회원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③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25% 절대량 감축안을 주장하는 등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.

○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마련한 1·2차 토론회, 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에서는 국가브랜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성 등 國格에 맞는 감축목표의 필요성에 따라 ③안(이상)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.

□ (최근 해외동향) 선진국은 '09년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에 있다.

○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감축목표를 기존 '90년 대비 8% 감축에서 25%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, 미국도 하원(Waxman-Markey 법안)에서 설정한 '05년 대비 17% 감축 목표를 상원(Kerry-Boxer 법안)에서는 20%로 상향조정('09.9)한 바 있으며,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IPCC의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'90년 대비 40% 감축목표 대열에 합류('09.10)하였다.

○ 다른 개도국도 감축목표 설정 자체를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적인 목표를 코펜하겐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.

- 중국은 原단위 방식으로 '05년 대비 "현저한 수준"으로 감축할 것임을 발표('09.9)하였고, 인도는 UN에서 미국과 유사하게 자국 국내법을 통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것임을 표명('09.9)하였다.

- 인도네시아는 우리 목표 ②안과 유사한 'BAU 대비 26%' 감축 목표(선진국 지원시 41% 감축까지)를 검토('09.10)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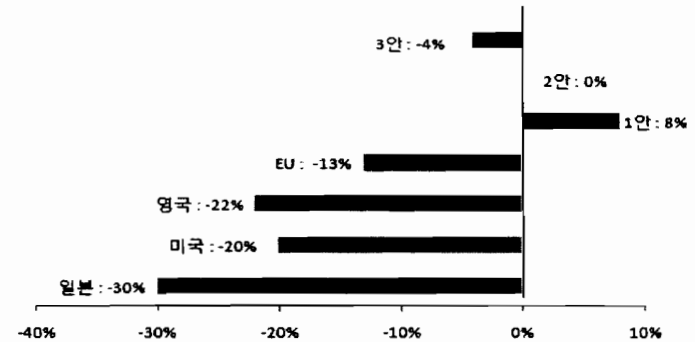
□ (해외 각국과의 목표수준 비교)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非의무 감축국이나,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·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
○ 이에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 측면에서 개도국에게 요구되는 최대치까지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.

· EU는 개도국의 경우 BAU 대비 15~30% 감축 선진국은 1990년 대비 25~40% 감축할 것을 권고

○ 선진국 목표와 비교할 경우,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진국(일본·미국·영국 등)은 13~30%까지 감소(-)하나, 우리나라는 8% 증가(+) ~ 4% 감소(-) 수준이다.

< 선진국과 우리나라 감축목표 비교(2005년 배출량 기준) >



□ (녹색위 여론조사) 시나리오 제시 직후 8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①안 또는 ②안이 선호되었으나, 최근 10월 조사에서는 ③안으로 여론이 선회하였다.

○ 8월조사에서도 감축수준은 선발개도국 또는 선진국 수준을 원했지만, 가계 비용부담을 의식하여 "일반국민은 ①안, 전문가는 ②안"을 선호하였다.

- 최근 10월 조사에서는, 올 9월의 UN정상회담 전후로 온실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국제적 분위기, 유가변동 등이 반영되어 “일반국민이 ③안을 지지”하는 것으로 선회되었다.
- 김형국 위원장은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의견수렴과정을 종합하여 “②안” 또는 “③안”의 선택을 제안하면서,
 - ②안은 경제주체별 부담이 적으나, 국내·외 시민단체의 반발은 크고 시그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지적하였으며,
 - ③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서 국제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반면, 산업계의 반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.
- 또한, 김위원장은 ②안과 ③안 모두,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유지·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과 교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,
 -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확정된 녹색성장 예산인 GDP의 2% 수준(‘09~’13년 107조원)을 투입하여 연평균 GDP 대비 약 3.5~4%의 생산유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

※ <붙임 2> : 의견수렴 경과 및 향후일정, 여론조사 결과

2. 저탄소 녹색도시·건축물 활성화 방안 (국토해양부)

- 국토해양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「녹색도시·건축물 활성화 방안」을 보고하였다.
-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, '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(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제로인 건축물)을 의무화할 계획이다.
 - 이를 위해 주택의 경우, '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%를 절감하도록 하고, '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*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.
 - * 에너지 성능이 현행 대비 60%이상 개선된 주택
-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'10년부터 창호, 벽 등의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'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하고,
 -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,
 - '12년부터 건축물을 매매·임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'10년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·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,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게 된다.

- 한편, 이러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를 현행 에너지 성능대비 약 30%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고,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.
- 또한, 노후화된 초·중·고등학교를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그린스쿨로 개선하고,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학도 그린캠퍼스로 조성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다.
- 그 외에 정부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인증을 의무화하며,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.
- 건축물뿐만 아니라 녹색도시 역시 단기적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, 검단 등의 일부구역에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한편, 혁신도시를 녹색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.
- 기존도시의 녹색화도 추진할 계획이다. 녹색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고, 강릉시 경포대 일대에 녹색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광역경제권별로 기존도시 재생형 녹색도시 사업을 추진하고, 녹색도시 관련기술을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해양부는 이번 건축물 대책을 통해 '20년까지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(BAU) 대비 31%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3.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 전략 (국토해양부)

- 이어, 국토해양부는 「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」을 보고하였다.
- 먼저,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빠른 교통부문에 대하여 강력한 수요관리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요일별,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.
- 자동차 공동사용(Car-Sharing) 도입, 경제적 운전습관(Eco-Drive) 정착 유도 등이 추진되고, '10년부터 지정되는 '녹색교통대책지역*'에서는 녹색교통수단 우선 운행, 대중교통 할인포인트(Eco-Point) 도입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진다.
 - * 탄소배출이 과다한 지역, 교통이 혼잡한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직권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
- 또한, 복합환승센터, 복합고밀도 역세권 개발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가 조성되며,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, 철도역 자전거 시설 확충, 자전거 도로망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다.
-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효율은 낮은 도로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전체 SOC 투자의 29%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투자를 '20년까지 50%로 끌어 올리는 대신,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투자는 57.2%에서 40%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다.

- 급행철도·간선급행버스·광역급행버스 확대, 연계환승시설 확충 등으로 도심 진입시간을 30% 단축함으로써 '07년 50%인 대도시권 대중교통의 분담율을 '20년까지 65%로 향상시킬 계획이다.
- 녹색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2단계제 열차(DST: 물류량이 2배로 향상되어 철도수송의 경쟁력이 향상)의 운행이 추진되고, 도로수송에서 철도·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업체에게는 '10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.
- '10년부터는 저속 전기자동차(NEV)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지고, 차세대 고속철도(400km/h)·자기부상열차·바이모달트랩 등도 개발하여 첨단 녹색교통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.
- 국토해양부는 이번 녹색교통 대책을 통해 '20년까지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(BAU) 대비 33~37% 감축하고, 이를 통해 연간 7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4.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방안 (지식경제부)

※ 보도자료 기 배부

- 다음으로 지식경제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「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」을 보고하였다.
- (에너지 목표관리제)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.
 -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(1TOE: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량) 이상 사업장은 '10년부터, 5만 TOE 이상 사업장은 '11년부터,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'12년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'에너지 목표관리제'를 적용받게 된다.
 -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'11년부터 본격 실시되며,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먼저인 내년부터 적용된다.
 - 또한,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'10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.
- (원자력 비중확대) 한편, 정부는 CO₂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*하기 위해 부지 및 자원 확보와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.

* '08년 24%에서 '30년 41%까지 원자력 발전비중 확대('08.8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)

○ 우선, 원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 의무화,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'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'을 개정하고 '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~3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

○ 원전건설 재원(1기당 4조원 내외 소요)을 조달하기 위해, 한국수력원자력(주)의 경영 효율화와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 도매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
○ 독자적 원천수출 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(APR+)을 '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, 원전 기술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하였다.

□ (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)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고,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○ 먼저,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*를 '12년에 시장친화적인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(RPS)**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'신재생 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' 개정, 세부실행 계획설계 등을 '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.

* FIT(Feed-In Tariff) :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별로 기준가격을 책정·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

**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: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생산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제도

○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도(RFS) 도입 검토, 시설원에 농사에 지열보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, 지열 에너지의 보급 가능성을 높이고, 그린홈 100만호 사업,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.

□ (스마트그리드 추진) 스마트그리드* 구축은 '10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'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.

*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T기술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,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안정적 전력망을 확보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

○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'스마트그리드 제품 인증제도'를 도입하는 한편,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또한, '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*를 도입하여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미터,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도 신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
* 소비자별 선택가능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

5.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(교육과학기술부·노동부)

※ 보도자료 기 배부

□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는 「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
□ 향후 5년간 녹색일자리가 전산업의 평균적인 일자리 증가율(1.3%)보다 빠른 속도(6.0%)로 증가하여 '13년에는 녹색일자리 규모가 약 81만개('08년 대비 약 20만개 증가)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태양광설비시스템 개발자, LED생산관리자, 그린카 설계 개발자, 생태도시 개발기획자, 농업환경컨설턴트, 정밀농업전문가, 탄소거래중개인 등이 유망 녹색직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

□ 이에, 정부는 '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'를 구축하기 위해 '①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', '②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', '③핵심녹색 인재양성'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먼저, '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'을 위하여

- 녹색성장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도입·운동되도록 「고용영향평가제도」를 도입하여 녹색고용 창출력을 제고하고,

-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구축 및 다양한 산업별 녹색일자리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공급을 추진한다.

※ 예시: 신재생에너지, LED 분야 등에서 산업별 협의체와 협약 체결

- 양질의 녹색일자리(decent green job) 창출을 위해 톨루엔 등 10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녹색사업장으로 전환을 촉진하고, 원격근무 등 환경친화적 고용형태를 활성화한다.

- 또한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「녹색사회적기업」 300개('09년 40개)를 육성하고, 산업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.

※ 예시: 숲생태관리인, 도시녹지관리원 등

② 아울러, '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'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추진된다.

-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, LED·스마트그리드,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 지원을 통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한다.

- 또한, 자동차·철강·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화 진전에 따른 녹색 근로자 전환 훈련체제를 구축하고,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한다.

· 특히, 기업, 사업주단체, 대학 등이 녹색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(Green skill alliance)을 구성하여 녹색기술 특화훈련을 실시할 경우 시설·장비비(3년간 최대 15억원), 전담인력 인건비(6년간 최대 1.2억원) 등을 우선 지원한다.

-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(예: LED응용 조명시공기능사, 전기자동차 기사, 탄소배출권거래사 등)하고,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녹색화도 강화된다.

③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인 '핵심녹색인재 양성'을 위하여 '13년까지 1.1조원을 투입하여 약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.

- 고급 핵심 녹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'12년까지 13개의 녹색 「전문대학원」을 지원하고, 녹색기술 관련 「특성화대학원」의 선정·지원을 강화한다.

※ 전문대학원 사례: 녹색에너지·융합소프트웨어·그린스쿨 등

-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세계적 수준의 녹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WCU(World Class University) 사업 및 WCI(World Class Institute)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- 지역 녹색인재 공급을 위해 「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」과 연계하여 비수도권 6개 광역권 내 19개 우수 지방대학을 녹색교육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예시: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 부품소재, 물산업 등

- 또한,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녹색금융, 녹색경영, 탄소배출권 거래 등 녹색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.

- 아울러, 녹색기능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(21개)의 녹색전문교육이 강화되며, 학교교육에서 녹색직업에 대한 진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〈붙임 1〉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계획

일시 및 장소 : '09.11.5(목), 10:00 ~ 11:45(105분), 청와대 영빈관

행사 주관 : 대통령비서실(미래비전비서관실), 녹색성장위원회

참석자 : 대통령, 녹색위 위원장 및 위원, 민간전문가 등

안건 및 회의 순서

시 간	행사내용	비 고
10:00~ 2'	국민의례	
10:02~ 3'	개회 및 회의순서 안내	
10:05~ 5'	대통령 인사말씀	
10:10~ 40'	안건 발표	
	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	녹색위 위원장
	②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	지식경제부 장관
	③ 저탄소 녹색도시, 건축물 활성화방안	국토해양부 장관
	④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	한국교통연구원 원장
	⑤ 녹색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	교과부·노동부 장관 직업능력개발원장
10:50~ 45'	토론	
11:35~ 7'	대통령 마무리말씀	
11:42 3'	폐회	

〈붙임 2〉 참고자료

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견수렴 경과 및 향후일정

1. 추진경과

- ('08.7) 대통령께서 G-8 확대 정상회의시 금년중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선언('09.7월 G-8 정상회의시 재차 약속)
- ('08.9)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팀*을 구성하여 국제 기준의 모형과 분석체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잠재량을 국내 최초로 체계적·통합적으로 분석(약10개월)
 - * 에너지경제연구원, 에너지기술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원, KDI, 산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산업계 업종별로 30차례의 토론회 실시
- ('09.7) 분석결과에 대해 명망있는 전문가(에너지·환경·경제 등 7인)로 검토위원회(위원장: 이희성 IPCC 부의장)를 구성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, 검증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 실시
- ('09.7.24) 1차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공식 기자회견(8.4)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후 국민 의견수렴 추진
 - 녹색위 주관 토론회 15회, 녹색위 주관 업종별 간담회 14회, 국회 주관 토론회 3회, 지방 공청회 4회, 산업계 주관 5회, 시민단체 주관 토론회 3회 등 총 44회 실시
 - 최종적으로 국회 기후특위 논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녹색위 민간위원(10.12) 및 과학기술협의체(10.13) 의견수렴
 -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3회 실시
- ('09.10) 2차 관계부처 차관회의(10.26) 및 4개 부처 합동토론회(10.29-30) 개최

2. 향후 일정

- 위기관리대책회의(11.10),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(11.17)에서 최종 확정

<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견수렴경과 >

'08.9 ~ '09.6월(10개월)	7.5(일) ~ 7.7(화)
• 국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(연구용역) 실시 (산업계 8개 업종과 30여차례 회의)	• 검토위원회 구성 후 분석결과 검증

7.22(수)	7.24(금)	7.28(화)	8.3(월)	8.4(화)
• 산업계간담회(반도체)	• 1차 차관회의	• 경제5단체 간담회 • 당정협의	• 녹색위 간담회 • 시민단체 간담회 • 미디어그룹 간담회	•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• 3개 협의체 간담회(조선)
8.6(목)	8.7(금)	8.10(월)	8.12(수)	8.13(목)
• 관계부처 실무협의	• 산업계간담회 (석유화학,시멘트)	• 총리대안상의 간담회 • 산업계간담회 (철강, 발전, 제지, 디스플레이)	• 산업계간담회(정유)	• 공청회(녹색위)
8.18(화)	8.21(금)	8.25(화)	8.31(월)	9.1(화)
• 기후재단공청회	• 무역협회설명회	• 경실련공청회	• 산업협의체 CEO간담회 • 지방공청회 (부산경남대구경북)	• 전문가여론조사 완료(8.4 ~ 9.1일)
9.2(수)	9.3(목)	9.7(월)	9.9(수)	9.10(목)
• 지방공청회 (충청권) • 산업계간담회 (에너지포럼)	• 지방공청회 (호남권)	• NGO합동공청회	• 산업계 대토론회	• 국회기후포럼
9.14(월)	9.17(목)	9.18(금)	9.23(수)	9.24(목)
• 일반인여론조사 완료(8.15~9.14일)	• 산업계간담회 (석유화학)	• 총리주재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	• 1차 국회대토론회	• 전경련 기업경영 협의회 간담회
9.28(월)	9.29(화)	9.30(수)	10.6(화)	10.7(수)
• 산업계·시민단체 합동 원탁토론회	• 2차 국회대토론회	• 기후재단 2차 공청회	• 전경련 간담회 (자원에너지 위원회)	• 녹색생활협의회
10.12(월)	10.13(화)	10.16(금)	10.20-22	10.23-26
• 녹색위 민간위원 간담회	• 녹색과학기술 협의회	• 시민단체 합동 간담회	• 업종별 간담회 (철강, 정유, 시멘트, 석유화학, 제지)	• 전화여론조사 • 2차 차관회의 (26일)

국가 감축목표 여론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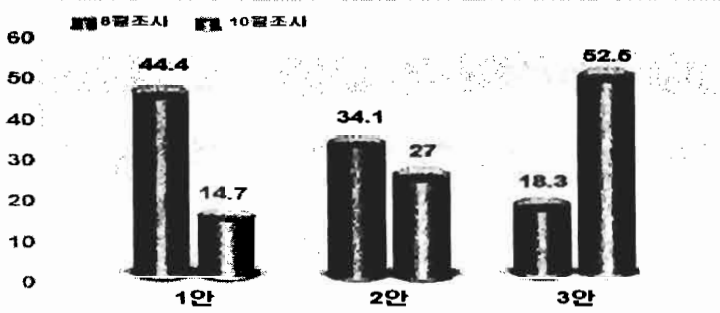
1. 조사개요

◆ 조사기간 : '09.10.24 ~ 26일	◆ 조사대상 :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
◆ 유효표본은 1037명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± 3.04%p	* 표본추출방법 : 지역, 성,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
◆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	
◆ 조사기관 : (주) 월드리서치	

2. 조사결과

- (감축목표 발표에 대한 인지 및 공감)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절반(48.2%) 수준이며, 국민 대다수(92.4%)가 금년 중 감축목표 발표에 대해 찬성
- (적정 감축지위 수준) 응답자의 80% 가량이 우리나라가 '선발개도국'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응답
 - 응답자의 41.9%가 선발개도국 수준, 36.7%가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, 개도국 수준 감축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3.1%에 불과
- (정부 시나리오에 대한 인지 및 선호도) 시나리오중 '3안'의 선호도(52.5%)가 가장 높았으며, '2안'(27%), '1안'(14.7%) 순임

< 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 비교(8월/10월 조사) >



〈붙임 3〉 담당자 연락처

[안건 1]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	최민지 사무관	02-735-2485	minjichol@korea.kr

[안건 2]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	안세진 서기관	02-2110-5422	ahnsejin@mke.go.kr

[안건 3] 저탄소 녹색도시·건축물 활성화 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건축기획과	최종욱 사무관 김민철 사무관	02-2110-8194 02-2110-8203	jwc2002@korea.kr mchklm@korea.kr

[안건 4] 저탄소 녹색교통 추진전략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국토해양부 중요교통정책과	이지혜 사무관	02-2110-8657	jlhye21@korea.kr

[안건 5] 녹색일자리 고용지원 및 인력양성방안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기술반과 노동부 고용정책과	오판동 사무관 조정숙 사무관	02-2100-6733 02-2110-7160	pandong@mest.go.kr jscho77@molab.go.kr